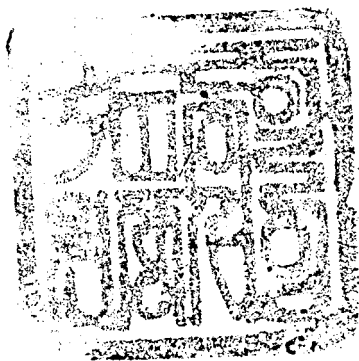


# 北韓의 聯邦制 主張과 그 正體

章洙棟(統一研修院 教授)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聯邦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가 聯合國家, 즉 Federation이라고 부르는 聯邦이고 그 다른 하나는 國家聯合, 즉 Confederation이라고 부르는 聯邦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형태의 연방국은 聯合國家이든 國家聯合이든 간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聯邦을 구성하는 組成國(State, Land, Canton, Province)이 같은 이념과 제도, 같은 사상과 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北側이 1960年 이래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있는 南北聯邦制案은 그들 스스로의 말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종의 괴물인 것이다. 北側은 南北聯邦制를 두고 單一民族이라는 共通性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성격의 聯邦이라 주장하면서 對內的으로는 Federation 같은 냄새를, 對外的으로는 Confedera-

tion같은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sup>1)</sup>, 과도적 조치라 했다가 통일의 완성체라 하기도 하고 또한 南北의 상이한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도 南韓에서의 민주정권<sup>2)</sup> 출현을 조건으로 삼아 南韓體制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횡설수설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北側이 말하는 南北聯邦制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북한공산집단이 신봉하는 사고방식인 유물변증법적 원리와

---

註 1) 北側은 1980年 第6次 勞動黨大會時의 對南 提議에서는 南北이 民族聯合軍을 創設할 것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란 單一國號로 UN에 加入하자고 해 聯合國家인 것같은 냄새를 피우면서도 그들의 英字新聞 「The Pyong-Yang Times」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卽 國家聯合으로 表現하는 僞計를 弄하고 있다.

2) 北側은 聯邦制實現의 前提條件으로 「民主政權」出現을 是非하고 있는데 共產黨이 말하는 民主政權이란 共產政權을 뜻하는 別稱, 代名詞인 것이다.

행동방식인 전략·전술적 운용원리를 中心으로 그 정체를 벗겨 보기로 한다.

## 2

북측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부위원장 전금철은 소위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을 두고 “세계의 20여개 聯邦國家들은 모두 다 하나의 공통한 사회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聯邦이지만 우리의 聯邦은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한 聯邦으로서 이것은 「民族統一」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공통의 사회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單一民族」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연방”이라고 說明<sup>3)</sup> 함으로써 마치 체제를 달리하는 상이한 支分國間

---

註 3) 전금철, 1981年 11月 3日부터 6日까지 「비엔나」에서 開催한 「祖國統一을 위한 北과 海外同胞 基督者間의 對話」集會時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적 과제」題下의 主題發表 內容中の 發言에서

의 聯邦制가 성립 가능한 것처럼 強辯하고 있는데 과연 共產主義가 신봉하는 혁명철학인 唯物辨證法的 시각에서 볼 때 南의 자본주의와 北의 공산주의체제가 공존하는 南北聯邦制가 성립 可能한가 부터 檢證해 보기로 한다.

북한공산집단의 思考原理로 되어 있는 唯物辨證法은 「혁명적 발전」에 해당하는 「질적 변화」를 중시하며 「개량적 발전」에 해당하는 「양적 변화」를 중시하는 것은 곧 반동적이며 非革命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唯物辨證法에 따르면 우주만물은 「正」과 「反」이 「합」으로 綜合되어 發展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것 속에서 발생한 새것이 낡은 것을 驅逐 및 除去하는 革命的 變革을 통하여 發展하는 것이 眞理인 것처럼 強辯되고 있다.

따라서 唯物辨證法이 마치 唯物論에 입각하고 있기는 하나 헤겔 (Hegel) 辨證法과 마찬가지로 「正, 反, 合」的 發展을 原理視하는 것으로 믿는 誤判이 그 얼마나 重大한 問題傾向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오판

자야 말로 北側의 聯邦制에 의한 南北合作論이 마치 「正, 反, 合」의 理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그 策略的 本性을看過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社會에는 헤겔辨證法이나 唯物辨證法을 제대로 研究해 본 일도 없으면서 덮어 놓고 「辨證法」이라면 그것들이 모두 一律적으로 「正, 反, 合」의인 發展 모델인 것으로 推理獨斷하고 있는 似而非 知識人이 想像外로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唯物辨證法의 造作來歷을 확인하지도 못한채 誤判外書를 眞本視하면서 唯物辨證法을 「正, 反, 合」의인 것으로 誤導함으로써 우리 社會에 적지않는 害毒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共產主義의 現實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그 理論體系만은 비판의 여지가 없다는 식의 생

---

註 4) 北韓研究所刊, 〈北韓〉 1981年 8月號 (通卷 116號), 51 및 57面 參照

각을 지닌 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같은 誤導事實을 실증하는 뚜렷한 證左이다.<sup>5)</sup> 이들이 共產主義를 보는 태도는 스탈린, 毛澤東 및 金日成등이 공산주의의 숭고한 理想을 조급하게 現實化시키려는 데에서 비롯된 試行上의 錯誤를 저지른 것 짬으로 생각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이야말로 앞으로 신중하고 有德한 人物이 등장하기만 하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理想社會를 實現할 수 있는것이 共產主義라는 믿음을 낳게 될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점에서 人文·社會科學의 一定한 課程을 마치기만 하면 對共批判教育을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無定見한 상식론은 참으로 위험하다 할 것이다.

오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헤겔 辨證法과 唯物辨證法의 차이점을 되풀이 論及한다면 헤

---

註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研究室, 〈韓國思想과 倫理〉, 1980, 473面



질辨證法은 「正」과 「反」의 「合」으로의 綜合的 統一을 우주만물의 發展原理로 삼는데 반하여 唯物辨證法은 낡은 A속에서 B라는 새 것이 발생, 성장함에 따라서 드디어 A가 消滅되고 B로써 그 내용이 唯一化되고 그와 같이 統一되자 마자 또다시 새로운 C가 發生한다는 식의 運動을 우주만물의 發展法則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이와같이 唯物辨證法은 A가 B로 B가 다시 C로 轉化될때, C는 곧 次元높은 A', 즉 A라는 것이며 그 A'속에는 A와 B의 내용이 逐次的으로 吸收, 蓄積되어 있다는 식의 論理인바, 이때의 逐次的 「축적」을 「종합」으로 誤認하고 있는 데에서 唯物辨證法을 「正, 反, 合」的인 것으로 誤判하는 경향이 盛行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

註 6)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 明成出版社, 1982, 129面  
7) 上揭書, 136面

唯物辨證法에서 말하는 최초의 否定은 곧 私有制社會에 의한 原始共同體의 交替를 뜻하며 두번째 否定은 近代共產制에 의한 私有制社會의 否定을 合理化시키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唯物辨證法에서 論及하는 「否定의 否定」은 헤겔辨證法에서 말하는 「正」과 「反」의 否定 및 「正」과 「反」의 「合」에 의한 否定과 같은 妥協的인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非妥協的인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全一的, 唯一的인 論理인 것이다. 다시 말해 헤겔辨證法의 特徵은 妥協的인 共存論理이며 相補的인 調和論理인데 반해 唯物辨證法의 特徵은 非妥協的인 征服論理이며 相剋的인 滅舊生新論理인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때 南北이 相異한 政治制度를 그대로 둔채 「民族」이라는 共通分母를 가지고 聯邦制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 北側의 主張이 그 얼마나 欺瞞的인 虛構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革命哲學으로 鐵則視하는 唯物辨證法(唯物史觀)이 너무나도 잘 立證해주고 있

다. 따라서 金日成集團이 마르크스·레닌主義集團임을 自處하고 있는 이상 對立物의 調和와 止揚이라고 하는 「民族統一」概念이 나올 수 없고 다만 對立物의 相剋的 敵對的 鬭爭에 의한 滅舊生新의 過渡的 過程으로서의 「聯邦制」가 可能할 뿐이다. 平壤에서 發刊된 그들의 公式文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高麗聯邦共和國의 特性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항구적이며 鞏固한 聯合인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過渡的인 對策으로 취해진 臨時的인 聯合이라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그 存在目的의 臨時性과 性格의 過渡性을 明白히 하고 있다.<sup>8)</sup>

또 한가지 北側은 聯邦制를 論함에 있어 「民族」을 마치 超體制的 統一理念으로 信奉하는 양 強調하고 있으나 이는 民族을 두고 資本

---

註 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1975, 249~250面

主義社會의 產物로서 장차 共產主義社會가 오면 마땅히 消滅되어야 하는 對象으로 삼는 民族觀을 지닌<sup>9)</sup> 共產主義者로서는 감히 입을 수 없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眞正으로 우리와 같은 民族觀을 가졌다면 우리와는 質的으로 다른 階級主義體制를 갖출 必要性부터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自體矛盾을 감추기 위하여 1970年代 以後부터, 民族이라는 말의 範疇를 설명함에 있어서 스탈린이 제시한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4大構成要件 以外에 「血緣」을 새로이 追加하는 말장난을 그들이 發刊한 「정치사전」에서 부리고 있다.<sup>10)</sup> 이는 우리와 血統이 다른 駐韓美軍을 憎惡케 하고 특히 南北聯邦制를 合理化시키기 위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指導에 따른 戰術的 措置로서, 만약 南韓

---

註 9) 스탈린,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 1913

10)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1973  
423面

에 人民政權이라고 하는 共產政權이 들어서고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할 단계에 들어서면 당연히 修正될 性格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당면목표는 南韓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을 成就하는 것이지만 그 최종 목표는 民族의 消滅을 전제로하는 共產主義社會를 實現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11)</sup>

### 3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北韓共產集團이 信奉하는 唯物辨證法이 헤겔辨證法式 「正, 反, 合」的 聯邦制를 不容하는 이상 北側이 내세운 南北聯邦制란 그들의 행동규범인 戰略·戰術的 次元의 發想임이 分明해진 것이다.<sup>12)</sup>

歷史的 經驗에서 보면 聯邦制를 共產化革命의 戰術的 計策으로 가장 먼저 利用한 자가

---

註 11) 北韓勞動黨規約(1980.10.13 6次黨大會)前文

12) 1972.11.22 字 平壤방송은 南北聯邦制의 提議가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임을 밝힌 바 있다.

共產主義 戰略·戰術을 開發한 레닌인데, 레닌은 1917年 볼셰비키革命으로 中央러시아를 共產化시킨 다음 짜르政權이 거느리던 邊疆의 異民族으로 구성된 10여개의 植民地(屬領)를 抵抗없이 共產化, 소비에트化시키기 위해 聯邦制란 戰術을 짜낸바 있다. 레닌은 1920年 코민테른 第2次 大會에 내놓은 「民族 및 植民地, 半植民地問題에 관한 提제」 第7項에서 聯邦制를 다음과 같이 規定함으로써 「白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카브카스」등 그들이 急造한 14個 少數民族共和國을 볼셰비키政權의 屬領으로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每個의 相異한 民族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트(共產黨의 代名詞)가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過程으로서의 「過渡的」 政權形式의 聯邦制”란 것이었는데 이것은 곧 對象地域의 公산화를 위한 過渡的 措置, 즉 轉술적 임무가 바로 聯邦制의 實現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소련의 경우는 異民族間의 체제를 같이하는 聯邦이었다는 점에서 聯邦構成의 外

形的 具備要件은 일단 갖춘 셈이 된다.

이와같은 레닌의 戰術的 기만을 한술 더떠 스탈린은 後進國 共產化革命을 위한 戰術的 教唆로서 “형식은 民族的으로 내용은 社會主義的으로!”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바 있는데<sup>13)</sup> 이 公式을 그대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 바로 北側 聯邦制案의 正體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 北韓을 「正」(資本主義)과 「反」(共產主義)으로 삼고 그것을 「合」(民族)으로 묶어서 統一하자는 식의 수작은 “形式은 헤겔 변증법적으로, 內容은 유물변증법적으로!” “形式은 남북연방제로, 內容은 남조선 공산화혁명 與件 造成으로”의 戰術的 僞計方式임을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證據는 現行 朝鮮勞動黨規約이다. 同規約 前文에는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

---

註 13) 스탈린, 東方勤勞者共產大學 學生大會에서  
의 演說中에서 (1925.5.18)

(韓半島全域을 의미)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 혁명과업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韓半島全域을 共產化시키는 것이 그들의 當然한 任務임을 明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이 開發한 公산주의 전략·전술을 體系化하고 定式化한<sup>14)</sup> 스탈린은 레닌主義 戰略·戰術을 가리켜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의 別稱)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指導하는데 관한 科學”이라 規定하고 그 具體的인 行動指針으로서의 전술운용원리를 概略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共産黨은 革命의 主·客體的與件에 따라 滿潮期에는 정면공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攻擊型戰術을 驅使하고 干潮期에는 自

---

註 14) 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 1924, 同 <레닌주의의 제문제> 1939, 외 국문서적출판부, 1949 (한국어판), 111~119面



己生存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後退型戰術을 驅使하고 沈滯期에는 대열정비, 역량비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驅使하고 昂揚期에는 彼我力量計算 및 試驗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攻勢的 防禦型戰術을 구사하되 정면 攻擊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沈滯期와 昂揚期戰術段階에서는 防禦型戰術과 병행해서 迂廻 攻擊型戰術의 具體的인 形態가 統一戰線戰術<sup>15)</sup>이다. 통일전선전술이란 쉽게 說明하면 共產黨이 所期の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 當面 타도 對象만을 除外한 各계각층의 광범한 非共產勢力을 利用하기 위한 暫定的인 同盟(聯合 또는 提携)組織技法을 뜻하는 것인바 여기에는

---

註 15) 統一戰線戰術이란 레닌이 「共產主義左傾小兒病」(1920)이란 책에서 教唆한 것인데 敵의 敵은 暫定的인 同志라는 發想에서 나온 것이다. 그 始發은 共產黨이 大衆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考案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共產黨이 主敵을 包圍, 弧立化시키고 革命力量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能動的 戰術로까지 發展되었다.

上層統一戰線戰術과 下層統一戰線戰術이 있다. 上層統一戰線戰術을 一面 技術적동맹 또는 提携라 하고 下層統一戰線戰術을 전략적동맹 또는 提携라 부르는데 그 理由는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은 가변적 속성을 지닌데 비해 下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은 불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視角에서 북側이 上層統一戰線戰術 對象으로 삼는것은 南韓의 경우 政府當局, 政黨·社會團體 幹部, 個別의 著名人士등이 될 수 있고 下層統一戰線戰術 對象은 勞動者, 農民, 進步的 青年學生·知識人, 宗教人, 中小商工業者, 下級公務員·軍人, 일부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新中產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留意할 點은 上層統一戰線戰術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가치가 없고 오직 下層統一戰線戰術 驅使에 복무, 기여할 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北側이 提起하고 있는 聯邦制란 바로 우리 政府 당국을 상대로 上層統一戰線戰術을 驅使하겠다

는 것으로서 그들이 노리는 바는 聯邦制를 통해 눈위의 혹格인 駐韓美軍을 몰아내고 國家保安法을 廢棄시켜 南韓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合法化시킴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當面 대남혁명 전략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與件을 造成하자는 것인바, 이것이 바로 고려연방제안에 부여된 전술적 임무인 것이다. 北側이 여태껏 南北聯邦制를 두고 統一될 때까지의 過渡的 對策 또는 과도적 조치임을 強調하면서 우리政府 當局을 聯邦制 協議의 一方 當事國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같은 底意에 바탕을 둔 戰術的 指導原理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側은 1973年 체코共産黨 書記長 「후사크」歡迎大會 이후, 좀더 확실하게는 1980年 10月 第6次 勞動黨大會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립방안을 내놓은 다음부터는 聯邦制를 두고 그 자체가 통일의 終着驛<sup>16)</sup>,

---

註 16) 1981.6.16 日 玄峻極 (勞動黨國際部副部長)의 東京發言

統一憲章<sup>17)</sup> 云謂하면서 統一의 完成體라 強調  
 할뿐 아니라 聯邦制의 協議對象에서 우리政府  
 當局을 배제하는 대신, 「大民族會議」와 「南  
 北政治協商會議」등을 登場시키고 있는데 이는  
 聯邦制의 전술적 기만성에 대한 內外의 이목  
 을 가리고 통일열망에 편승한 宣傳的 效果만  
 누리면서 內心으로는 上層統一戰線戰術로서의 聯  
 邦制를 거칠 必要도 없이 下層統一戰線戰術效  
 果의 極大化(例:南韓의 노·학연계투쟁전열형  
 성등)를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을 세운 다음  
 곧 바로 北韓社會主義體制에 흡수통일 즉 併

---

註 17) 北側은 1980.11.5 日 <로동신문>을 통  
 해 「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립방안을 「統  
 一憲章」이라 선포하고 있다.

金日成은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도 서  
 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개의 상이한 체  
 제가 공존하는 단일통일국가가 이 지구  
 상에 있어 본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상식적  
 으로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국가를  
 두고 통일국가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呑的 方法 (Annexation) 으로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저의의 발로인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南朝鮮」공산화혁명의 전도를 두가지 밝힌바 있는데<sup>18)</sup> 그 하나가 「非平和的 前途」이고 다른 하나가 「평화적 前途」이다. 비평화적 전도란 6.25 동란때와 같이 인민군 무장력을 총동원해서 남한을 軍事的으로 정복하겠다는 뜻이고 평화적 前途란 남한 내부에서 民衆蜂起를 일으켜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뜻인데 유념할 점은 비평화적 전도를 구사할 때의 「中心고리戰術」이 주한미군의 추방이고 평화적 전도를 구사할 때의 中心고리戰術이 바로 南北聯邦制라는 것이다.

#### 4

이상에서 北側의 聯邦制案이 지닌 속성을 그들의 인식원리인 唯物辨證法과 실천원리인 戰

---

註 18) 사회과학출판사(평양)전게서, 264면,  
〈김일성저작선집〉제 1권, 1967, 57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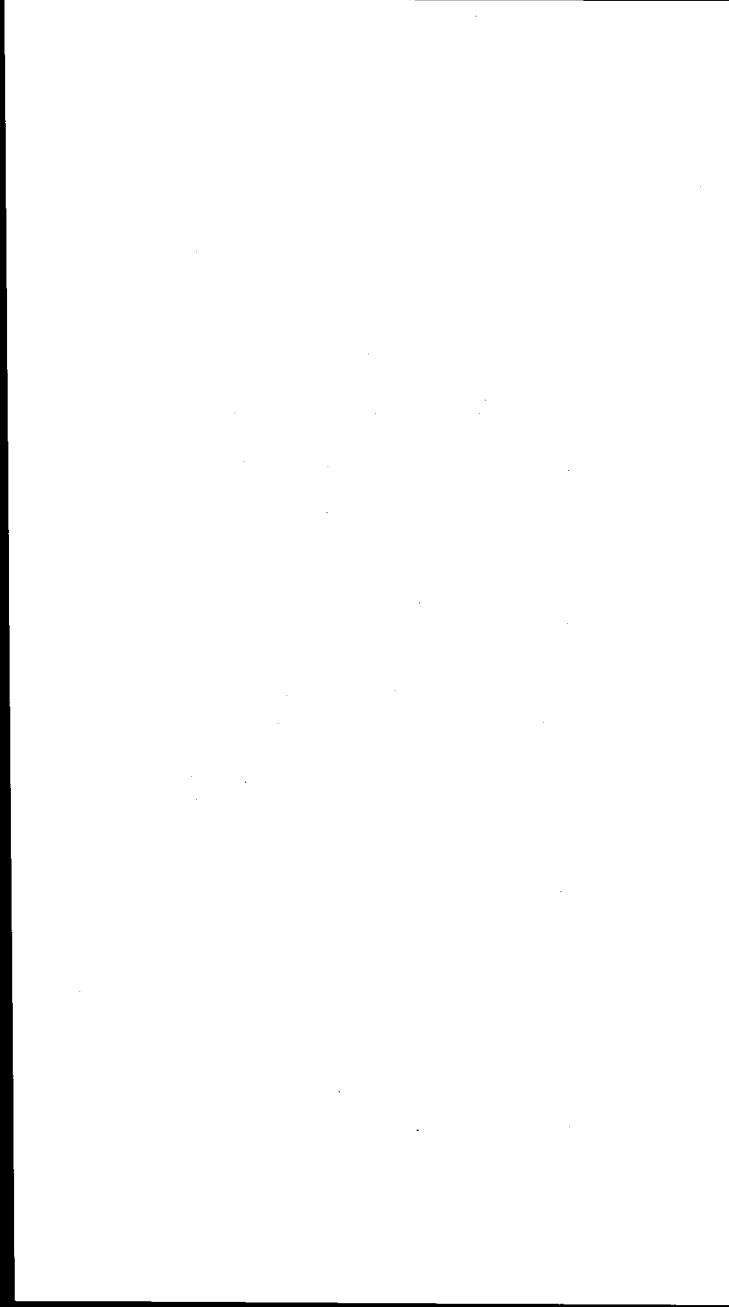
略·戰術에 비추어 검증해 보았다. 북측은 그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聯邦制案이 마치 「正, 反, 合」의 이념의 소산인 것처럼 남한국민을 오인케 함으로써 우회공격형전술로서의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實効를 거두려는 기만을 弄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공식文獻을 통해 입증되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北側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唯物辨證法과 그 戰略·戰術을 思考 및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한 聯邦制統一方案은 쉽사리 바꿀 수 없는 그들의 固定路線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 政府가 民族統一問題를 놓고 그들에게 제아무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해 보아도 「牛耳讀經」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문제에 관한 對北提議는 우선 그러한 北側의 戰略的 저의를 만천하에 폭로하는데 그 실질적인 意義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北側 연방제안의 기만성에 대한 科學的 暴露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民族統一을 뚝뚝하게 실현하는데 필요한

內外情勢를 조성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첩경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北側이 우리의 합리적인 提議를 善意에 의거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식의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力不足임을 自認함으로써 피동적으로나마 불가불 우리의 제의에 접근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현실적인 힘에 의하여 꾸준히 필요한 內外情勢를 조성해 나가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北側은 헤겔辨證法的 형식을 통하여 내용적으로는 唯物辨證法的 反轉을 꾀하고 있음을 한 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唯物辨證法的 思考 및 戰略·戰術的 행동방식을 誤認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그들의 高麗聯邦制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北側의 思考 및 행동방식을 正視하고 그들을 壓倒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때, 비로소 北側은 그 僞計的인 聯邦制案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附錄〉

金日成의 南北聯邦制提議 關聯資料

1. 8.15 해방 15周年 慶祝大會 演說  
( 1960. 8. 14 )
2. 체코共産黨 書記長 후사크 환영 平壤市  
群衆大會 演說 ( 1973. 6. 23 )
3. 勞動黨 제 6 차대회 사업총화보고  
( 1980. 10. 10 )
4. 북한정권 創建 35周年 경축연 演說  
( 1983. 9. 9 )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 1. 8.15 해방 15周年 慶祝大會 演說

( 1960.8.14 )

## <전 략>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계각층 인민들에게 이러한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

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도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히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 민족에 리로운 경제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호상 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

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  
입니다.

2. 체코共産黨 書記長 후사크 환영 平壤市  
群衆大會 演說 ( 1973.6.23 )

<전 략>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

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 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 <중 략>

우리는 UN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UN에 들어가려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 3. 勞動黨 제 6 차대회 사업총화보고

( 1980.10.10 )

#### <전 략>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 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



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  
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  
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  
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  
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  
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  
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  
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  
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  
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  
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뽄력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빨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이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합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

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 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

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

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

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공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

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와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빨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 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 4. 북한정권 創建 35周年 경축연 演說

( 1983.9.9 )

##### <전 략>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의 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지역을 포괄하는 련방국가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의

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료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인민은 민족통일의 숙원을 성취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대외적으로 통일된 단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 北韓의 聯邦制主張과 그 正體

1989年 6月 12日 印刷

1989年 6月 14日 發行

發行：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印刷：웃 고 文化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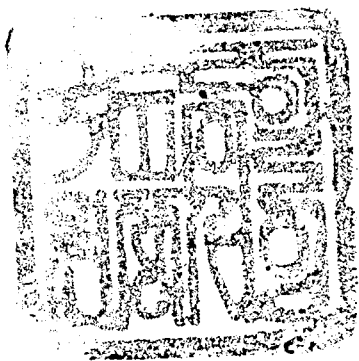




89-6-49

# 北韓의 聯邦制 主張과 그 正體

章洙棟(統一研修院 教授)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聯邦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가 聯合國家, 즉 Federation이라고 부르는 聯邦이고 그 다른 하나는 國家聯合, 즉 Confederation이라고 부르는 聯邦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형태의 연방국은 聯合國家이든 國家聯合이든 간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聯邦을 구성하는 組成國(State, Land, Canton, Province)이 같은 이념과 제도, 같은 사상과 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北側이 1960年 이래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있는 南北聯邦制案은 그들 스스로의 말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종의 괴물인 것이다. 北側은 南北聯邦制를 두고 單一民族이라는 共通性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성격의 聯邦이라 주장하면서 對內的으로는 Federation 같은 냄새를, 對外的으로는 Confedera-

tion같은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sup>1)</sup>, 과도적 조치라 했다가 통일의 완성체라 하기도 하고 또한 南北의 상이한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도 南韓에서의 민주정권<sup>2)</sup> 출현을 조건으로 삼아 南韓體制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횡설수설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北側이 말하는 南北聯邦制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북한공산집단이 신봉하는 사고방식인 유물변증법적 원리와

---

註 1) 北側은 1980年 第6次 勞動黨大會時의 對南 提議에서는 南北이 民族聯合軍을 創設할 것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란 單一國號로 UN에 加入하자고 해 聯合國家인 것같은 냄새를 피우면서도 그들의 英字新聞 「The Pyong-Yang Times」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卽 國家聯合으로 表現하는 僞計를 弄하고 있다.

2) 北側은 聯邦制實現의 前提條件으로 「民主政權」出現을 是非하고 있는데 共產黨이 말하는 民主政權이란 共產政權을 뜻하는 別稱, 代名詞인 것이다.

행동방식인 전략·전술적 운용원리를 中心으로  
그 정체를 벗겨 보기로 한다.

## 2

북측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부위원장 전금철은 소위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을 두고 “세계의 20여개 聯邦國家들은 모두 다 하나의 공통한 사회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聯邦이지만 우리의 聯邦은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한 聯邦으로서 이것은 「民族統一」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공통의 사회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單一民族」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연방”이라고 說明<sup>3)</sup> 함으로써 마치 체제를 달리하는 상이한 支分國間

---

註 3) 전금철, 1981年 11月 3日부터 6日까지 「비엔나」에서 開催한 「祖國統一을 위한 北과 海外同胞 基督者間의 對話」集會時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적 과제」題下의 主題發表 內容中の 發言에서

의 聯邦制가 성립 가능한 것처럼 強辯하고 있는데 과연 共產主義가 신봉하는 혁명철학인 唯物辨證法的 시각에서 볼 때 南의 자본주의와 北의 공산주의체제가 공존하는 南北聯邦制가 성립 可能한가 부터 檢證해 보기로 한다.

북한공산집단의 思考原理로 되어 있는 唯物辨證法은 「혁명적 발전」에 해당하는 「질적 변화」를 중시하며 「개량적 발전」에 해당하는 「양적 변화」를 중시하는 것은 곧 반동적이며 非革命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唯物辨證法에 따르면 우주만물은 「正」과 「反」이 「합」으로 綜合되어 發展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것 속에서 발생한 새것이 낡은 것을 驅逐 및 除去하는 革命的 變革을 통하여 發展하는 것이 眞理인 것처럼 強辯되고 있다.

따라서 唯物辨證法이 마치 唯物論에 입각하고 있기는 하나 헤겔 (Hegel) 辨證法과 마찬가지로 「正, 反, 合」的 發展을 原理視하는 것으로 믿는 誤判이 그 얼마나 重大한 問題傾向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오판

자야 말로 北側의 聯邦制에 의한 南北合作論이 마치 「正, 反, 合」의 理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그 策略的 本性을 看過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社會에는 헤겔辨證法이나 唯物辨證法을 제대로 研究해 본 일도 없으면서 덮어 놓고 「辨證法」이라면 그것들이 모두 一律적으로 「正, 反, 合」의인 發展 모델인 것으로 推理獨斷하고 있는 似而非 知識人이 想像外로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唯物辨證法의 造作來歷을 확인하지도 못한채 誤判外書를 眞本視하면서 唯物辨證法을 「正, 反, 合」의인 것으로 誤導함으로써 우리 社會에 적지않는 害毒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共產主義의 現實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그 理論體系만은 비판의 여지가 없다는 식의 생

---

註 4) 北韓研究所刊, 〈北韓〉 1981年 8月號 (通卷 116號), 51 및 57面 參照

각을 지닌 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같은 誤導事實을 실증하는 뚜렷한 證左이다.<sup>5)</sup> 이들이 共產主義를 보는 태도는 스탈린, 毛澤東 및 金日成등이 공산주의의 숭고한 理想을 조급하게 現實化시키려는 데에서 비롯된 試行上의 錯誤를 저지른 것 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이야말로 앞으로 신중하고 有德한 人物이 등장하기만 하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理想社會를 實現할 수 있는것이 共產主義라는 믿음을 받게 될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점에서 人文·社會科學의 一定한 課程을 마치기만 하면 對共批判教育을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無定見한 상식론은 참으로 위험하다 할 것이다.

오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헤겔 辨證法과 唯物辨證法의 차이점을 되풀이 論及한다면 헤

---

註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研究室, 〈韓國思想과 倫理〉, 1980, 473面



겉辨證法은 「正」과 「反」의 「合」으로의 綜合的 統一을 우주만물의 發展原理로 삼는데 반하여 唯物辨證法은 낡은 A속에서 B라는 새 것이 발생, 성장함에 따라서 드디어 A가 消滅되고 B로써 그 내용이 唯一化되고 그와 같이 統一되자 마자 또다시 새로운 C가 發生한다는 식의 運動을 우주만물의 發展法則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이와같이 唯物辨證法은 A가 B로 B가 다시 C로 轉化될때, C는 곧 次元높은 A', 즉 A라는 것이며 그 A'속에는 A와 B의 내용이 逐次的으로 吸收, 蓄積되어 있다는 식의 論理인바, 이때의 逐次的 「축적」을 「종합」으로 誤認하고 있는 데에서 唯物辨證法을 「正, 反, 合」的인 것으로 誤判하는 경향이 成行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

註 6)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 明成出版社, 1982, 129面  
7) 上揭書, 136面

唯物辨證法에서 말하는 최초의 否定은 곧 私有制社會에 의한 原始共同體의 交替를 뜻하며 두번째 否定은 近代共產制에 의한 私有制社會의 否定을 合理化시키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唯物辨證法에서 論及하는 「否定의 否定」은 헤겔辨證法에서 말하는 「正」과 「反」의 否定 및 「正」과 「反」의 「合」에 의한 否定과 같은 妥協的인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非妥協的인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全一的, 唯一的인 論理인 것이다. 다시 말해 헤겔辨證法의 特徵은 妥協的인 共存論理이며 相補的인 調和論理인데 반해 唯物辨證法의 特徵은 非妥協的인 征服論理이며 相剋的인 滅舊生新論理인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때 南北이 相異한 政治制度를 그대로 둔채 「民族」이라는 共通分母를 가지고 聯邦制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 北側의 主張이 그 얼마나 欺瞞的인 虛構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革命哲學으로 鐵則視하는 唯物辨證法(唯物史觀)이 너무나도 잘 立證해주고 있

다. 따라서 金日成集團이 마르크스·레닌主義集團임을 自處하고 있는 이상 對立物의 調和와 止揚이라고 하는 「民族統一」概念이 나올 수 없고 다만 對立物의 相剋的 敵對的 鬪爭에 의한 滅舊生新의 過渡的 過程으로서의 「聯邦制」가 可能할 뿐이다. 平壤에서 發刊된 그들의 公式文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高麗聯邦共和國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항구적이며 鞏固한 聯合인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過渡的인 對策으로 취해진 臨時的인 聯合이라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그 存在目的의 臨時性과 性格의 過渡性을 明白히 하고 있다.<sup>8)</sup>

또 한가지 北側은 聯邦制를 論함에 있어 「民族」을 마치 超體制的 統一理念으로 信奉하는 양 強調하고 있으나 이는 民族을 두고 資本

---

註 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1975, 249~250面

主義社會의 產物로서 장차 共產主義社會가 오면 마땅히 消滅되어야 하는 對象으로 삼는 民族觀을 지닌<sup>9)</sup> 共產主義者로서는 감히 입을 수 없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眞正으로 우리와 같은 民族觀을 가졌다면 우리와는 質的으로 다른 階級主義體制를 갖출 必要性부터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自體矛盾을 감추기 위하여 1970年代 以後부터, 民族이라는 말의 範疇를 설명함에 있어서 스탈린이 제시한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4大構成要件 以外에 「血緣」을 새로이 追加하는 말장난을 그들이 發刊한 「정치사건」에서 부리고 있다.<sup>10)</sup> 이는 우리와 血統이 다른 駐韓美軍을 憎惡케 하고 특히 南北聯邦制를 合理化시키기 위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指導에 따른 戰術的 措置로서, 만약 南韓

---

註 9) 스탈린,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 1913

10)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평양, 1973  
423面

에 人民政權이라고 하는 共產政權이 들어서고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할 단계에 들어서면 당연히 修正될 性格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당면목표는 南韓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을 成就하는 것이지만 그 최종 목표는 民族의 消滅을 전제로하는 共產主義社會를 實現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11)</sup>

### 3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北韓共產集團이 信奉하는 唯物辨證法이 헤겔辨證法式 「正, 反, 合」的 聯邦制를 不容하는 이상 北側이 내세운 南北聯邦制란 그들의 행동규범인 戰略·戰術的 次元의 發想임이 分明해진 것이다.<sup>12)</sup>

歷史的 經驗에서 보면 聯邦制를 共產化革命의 戰術的 計策으로 가장 먼저 利用한 자가

---

註 11) 北韓勞動黨規約(1980.10.13 6次黨大會)前文

12) 1972.11.22 字 평양방송은 南北聯邦制의 提議가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임을 밝힌 바 있다.

共產主義 戰略·戰術을 開發한 레닌인데, 레닌은 1917年 볼셰비키革命으로 中央러시아를 共產化시킨 다음 짜르政權이 거느리던 邊疆의 異民族으로 구성된 10여개의 植民地(屬領)를 큰 抵抗없이 共產化, 소비에트化시키기 위해 聯邦制란 戰術을 짜낸바 있다. 레닌은 1920年 코민테른 第2次 大會에 내놓은 「民族 및 植民地, 半植民地問題에 관한 提제」 第7項에서 聯邦制를 다음과 같이 規定함으로써 「白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카브카스」등 그들이 急造한 14個 少數民族共和國을 볼셰비키政權의 屬領으로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每個의 相異한 民族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트(共產黨의 代名詞)가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過程으로서의 「過渡的」 政權形式의 聯邦制”란 것이었는데 이것은 곧 對象地域의 公産化를 위한 過渡的 措置, 즉 轉술적 임무가 바로 聯邦制의 實現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소련의 경우는 異民族間의 체제를 같이하는 聯邦이었다는 점에서 聯邦構成의 外

形的 具備要件은 일단 갖춘 셈이 된다.

이와같은 레닌의 戰術的 기만을 한술 더떠 스탈린은 後進國 共產化革命을 위한 戰術的 教唆로서 “형식은 民族的으로 내용은 社會主義的으로!”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바 있는데<sup>13)</sup> 이 公式을 그대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 바로 北側 聯邦制案의 正體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 北韓을 「正」(資本主義)과 「反」(共產主義)으로 삼고 그것을 「合」(民族)으로 묶어서 統一하자는 식의 수작은 “形式은 헤겔 변증법적으로, 內容은 유물변증법적으로!” “形式은 남북연방제로, 內容은 남조선 공산화혁명 與件 造成으로”의 戰術的 偽計方式임을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證據는 現行 朝鮮勞動黨規約이다. 同規約 前文에는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

---

註 13) 스탈린, 東方勤勞者共產大學 學生大會에서  
의 演說中에서 (1925.5.18)

(韓半島全域을 의미)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 혁명과업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화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韓半島全域을 共產化시키는 것이 그들의 當然한 任務임을 明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이 開發한 公산주의 전략·전술을 體系化하고 定式化한<sup>14)</sup> 스탈린은 레닌主義 戰略·戰術을 가리켜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의 別稱)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指導하는데 관한 科學”이라 規定하고 그 具體的인 行動指針으로서의 전술운용원리를 概略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共産黨은 革命의 主·客體的與件에 따라 滿潮期에는 정면공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攻擊型戰術을 驅使하고 干潮期에는 자

---

註 14) 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 1924, 同 <레닌주의의 제문제> 1939, 외국문서적출판부, 1949 (한국어판), 111~119面



己生存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後退型戰術을 驅使하고 沈滯期에는 대열정비, 역량비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驅使하고 昂揚期에는 彼我力量計算 및 試驗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攻勢的 防禦型戰術을 구사하되 정면 攻擊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沈滯期과 昂揚期戰術段階에서는 防禦型戰術과 병행해서 迂廻 攻擊型戰術의 具體的인 形態가 統一戰線戰術<sup>15)</sup>이다. 통일전선전술이란 쉽게 說明하면 共產黨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 當面 타도 對象만을 除外한 各계各층의 광범한 非共產勢力을 利用하기 위한 暫定的인 同盟(聯合 또는 提携)組織技法을 뜻하는 것인바 여기에는

---

註 15) 統一戰線戰術이란 레닌이 「共產主義左傾小兒病」(1920)이란 책에서 教唆한 것인데 敵의 敵은 暫定的인 同志라는 發想에서 나온 것이다. 그 始發은 共產黨이 大衆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考案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共產黨이 主敵을 包圍, 弧立化시키고 革命力量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能動的 戰術로까지 發展되었다.

上層統一戰線戰術과 下層統一戰線戰術이 있다. 上層統一戰線戰術을 一面 技術적동맹 또는 提携라 하고 下層統一戰線戰術을 전략적동맹 또는 提携라 부르는데 그 理由는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은 가변적 속성을 지닌데 비해 下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은 불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視角에서 볼때 北側이 上層統一戰線戰術 對象으로 삼는것은 南韓의 경우 政府當局, 政黨·社會團體 幹部, 個別的 著名人士등이 될 수 있고 下層統一戰線戰術 對象은 勞動者, 農民, 進步的 青年學生·知識人, 宗教人, 中小商工業者, 下級公務員·軍人, 일부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新中產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留意할 點은 上層統一戰線戰術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가치가 없고 오직 下層統一戰線戰術 驅使에 복무, 기여할 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北側이 提起하고 있는 聯邦制란 바로 우리 政府 당국을 상대로 上層統一戰線戰術을 驅使하겠다

는 것으로서 그들이 노리는 바는 聯邦制를 통해 눈위의 혹格인 駐韓美軍을 몰아내고 國家保安法을 廢棄시켜 南韓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合法化시킴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當面 대남혁명 전략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與件을 造成하자는 것인바, 이것이 바로 고려연방제안에 부여된 전술적 임무인 것이다. 北側이 여태껏 南北聯邦制를 두고 統一될 때까지의 過渡的 對策 또는 과도적 조치임을 強調하면서 우리政府當局을 聯邦制 協議의 一方當事國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같은 底意에 바탕을 둔 戰術的 指導原理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側은 1973年 체코共産黨書記長 「후사크」歡迎大會 이후, 좀더 확실하게는 1980年 10月 第6次 勞動黨大會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립방안을 내놓은 다음부터는 聯邦制를 두고 그 자체가 통일의 終着驛<sup>16)</sup>,

---

註 16) 1981.6.16 字 玄峻極 (勞動黨國際部副部長)의 東京發言

統一憲章<sup>17)</sup> 云謂하면서 統一의 完成體라 強調  
 할뿐 아니라 聯邦制의 協議對象에서 우리政府  
 當局을 배제하는 대신, 「大民族會議」와 「南  
 北政治協商會議」등을 登揚시키고 있는데 이는  
 聯邦制의 전술적 기만성에 대한 內外의 이목  
 을 가리고 통일열망에 편승한 宣傳的 效果만  
 누리면서 內心으로는 上層統一戰線戰術로서의 聯  
 邦制를 거칠 必要도 없이 下層統一戰線戰術效  
 果의 極大化(例:南韓의 노·학연계투쟁전열형  
 성등)를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을 세운 다음  
 곧 바로 北韓社會主義體制에 흡수통일 즉 併

---

註 17) 北側은 1980.11.5 字 <로동신문>을 통  
 해 「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립방안을 「統  
 一憲章」이라 선포하고 있다.

金日成은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도 서  
 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개의 상이한 체  
 제가 공존하는 단일통일국가가 이 지구  
 상에 있어 본 일도 없을 뿐아니라 상식적  
 으로도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국가를  
 두고 통일국가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呑的 方法(Annexation)으로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저의의 발로인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南朝鮮」공산화혁명의 전도를 두가지 밝힌바 있는데<sup>18)</sup> 그 하나가 「非平和的 前途」이고 다른 하나가 「평화적 前途」이다. 비평화적 전도란 6.25동란때와 같이 인민군 무장력을 총동원해서 남한을 軍事的으로 정복하겠다는 뜻이고 평화적 前途란 남한 내부에서 民衆蜂起를 일으켜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뜻인데 유념할 점은 비평화적 전도를 구사할 때의 「中心고리戰術」이 주한미군의 추방이고 평화적 전도를 구사할 때의 中心고리戰術이 바로 南北聯邦制라는 것이다.

#### 4

이상에서 北側의 聯邦制案이 지닌 속성을 그들의 인식원리인 唯物辨證法과 실천원리인 戰

---

註 18) 사회과학출판사(평양)전게서, 264면,  
〈김일성저작선집〉제 1권, 1967, 576면

略·戰術에 비추어 검증해 보았다. 북측은 그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聯邦制案이 마치 「正, 反, 合」의 이념의 소산인 것처럼 남한국민을 오인케 함으로써 우회공격형전술로서의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實効를 거두려는 기만을弄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공식文獻을 통해 입증되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北側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唯物辨證法과 그 戰略·戰術을 思考 및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한 聯邦制統一方案은 쉽사리 바꿀 수 없는 그들의 固定路線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 政府가 民族統一問題를 놓고 그들에게 제아무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해 보아도 「牛耳讀經」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문제에 관한 對北提議는 우선 그러한 北側의 戰略的 저의를 만천하에 폭로하는데 그 실질적인 意義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北側 연방제안의 기만성에 대한 科學的 暴露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民族統一을 뚝뚝하게 실현하는데 필요한

內外情勢를 조성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첩경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北側이 우리의 합리적인 提議를 善意에 의거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식의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力不足임을 自認함으로써 피동적으로나마 불가불 우리의 제의에 접근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현실적인 힘에 의하여 꾸준히 필요한 內外情勢를 조성해 나가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北側은 헤겔辨證法的 形식을 통하여 내용적으로는 唯物辨證法的 反轉을 꾀하고 있음을 한 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唯物辨證法的 思考 및 戰略·戰術的 행동방식을 誤認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그들의 高麗聯邦制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北側의 思考 및 행동방식을 正視하고 그들을 壓倒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때, 비로소 北側은 그 僞計的인 聯邦制案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附錄〉

金日成의 南北聯邦制提議 關聯資料

1. 8.15 해방 15周年 慶祝大會 演說  
( 1960. 8. 14 )
2. 체코共産黨 書記長 후사크 환영 平壤市  
群衆大會 演說 ( 1973. 6. 23 )
3. 勞動黨 제 6 차대회 사업총화보고  
( 1980. 10. 10 )
4. 북한정권 創建 35周年 경축연 演說  
( 1983. 9. 9 )



# 1. 8.15 해방 15周年 慶祝大會 演說

( 1960.8.14 )

## <전 략>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계각층 인민들에게 이러한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

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도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히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 민족에 리로운 경제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호상 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

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  
입니다.

2. 체코共産黨 書記長 후사크 환영 平壤市  
群衆大會 演說 (1973.6.23)

〈전 략〉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

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 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 <중 략>

우리는 UN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UN에 들어가려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 3. 勞動黨 제 6 차대회 사업총화보고

( 1980.10.10 )

#### <전 략>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 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



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빨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이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합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

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 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

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

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

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에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공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

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빨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 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름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 4. 북한정권 創建 35周年 경축연 演說

( 1983.9.9 )

##### <전 략>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의 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지역을 포괄하는 련방국가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

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료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인민은 민족통일의 숙원을 성취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대외적으로 통일된 단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 北韓의 聯邦制主張과 그 正體

1989年 6月 12日 印刷

1989年 6月 14日 發行

發行：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印刷：우 고 文 化 社

